

18대 정기국회 첫날 여야 '감세안' 충돌

“서민경제 회생 조치” VS “부자들에 감세 선물”

국회는 1일 18대 정기국회 개회식을 갖고 100일간의 일정에 들어갔으나 여야는 이날 발표된 정부의 감세안을 놓고 공방을 주고받았다. 여야는 또 추경안과 언론조사 국정조사를 놓고도 이견을 보이고 있어 향후 국회 운영 과정에서 격돌이 예상된다.

이날 정부가 발표한 소득세와 법인세, 부동산세 등 대대적 세제개편안에 대해 한나라당은 “민생경제를 살리기 위한 적극적 조치”라며 환영했다.

한나라당은 특히 감세 효과가 기업이나 고소득층뿐 아니라 서민층에게도 골고루 돌아간다고 적극 홍보하는 한편 국회에서 관련 세제개편안의 통과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차명진 대변인은 현안브리핑에서 “정부의 세제개편은 경제살리기와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것”이라며 “특히 일자리 만들기, 예금저축세액공제, 감세혜택을 받는 60% 이상이 중산층과 서민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임태희 정책위의장은 “당이 주도해서 대기업의 법인세 인하 시기를 1년 미뤘다”며 “대기업이 고통을 분담하고 여기서 마련된 1조8천억원의 재원으로 저소득층의 생활을 지원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임태희 정책위의장은 “당이 주도해서 대기업의 법인세 인하 시기를 1년 미뤘다”며 “대기업이 고통을 분담하고 여기서 마련된 1조8천억원의 재원으로 저소득층의 생활을 지원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1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18대 국회 첫 정기국회 개회식에서 의원들이 국민주권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추경안·언론 국정조사’ 놓고도 이견 격돌 예고

의사 일정 합의 실패...개회사 직후 본회의 폐회

이날 여야는 “당이 주도해서 대기업의 법인세 인하 시기를 1년 미뤘다”며 “대기업이 고통을 분담하고 여기서 마련된 1조8천억원의 재원으로 저소득층의 생활을 지원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야권은 이날 정부의 세제 개편안에 대해 “서민과 중소기업에 외면한 불공정 개편안”, “부자를 위한 감세 종합선물세트”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민주당 이응석 제4정책조정위원장은 국회 브리핑을 통해 “고소득 재산가와 재벌·대기업에 혜택이 집중되고 고물가와 경기 침체로 가장 어려움을 겪는 중산·서민층과 중소기업은 철저히 외면한 개편안”이라고 혹평했다.

이 위원장은 또 “이번 개편안은 ‘고소득 재산가와 대기업에 세금 퍼주기’, ‘나라살림 거덜내는 무책임한 선심성 감세’, ‘현실에 안 맞는 레이거노믹스 베끼기’”라며 “이 세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저성장장과 고물가가 지속되고 재정적자와 빈부격차가 심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박승환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이번 세제개편안은 부자들을 위한 감

세 종합선물세트”라며 “재벌과 부유층에 관한 세금감면 혜택을 확대한다는 것은 국민통합과 경제위기 극복에 역행하는 본말이 전도된 조세정책”이라고 비난했다.

한편, 여야는 이날까지 의사일정에 합의하지 못했다.

한나라당 주호영, 민주당 서갑원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만나 정기국회 의사일정에 대한 협의를 벌였으나 언론 국정조사 문제를 놓고 입장이 엇갈리면서 조율에 실패했다.

민주당은 민주노동당과 창조한국당 등 야 3당이 지난달 26일 요구서를 제출한 ‘이명박 정부 방송장악 및 네티즌 탄압’에 대한 국정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한나라당은 국정감사가 예정돼 있는 상황에서 국정조사를 별도로 실시할 필요가 없다고 반대했다.

이에 따라 당초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처리될 예정이었던 정기국회 의사일정안은 상정되지 않았으며 이에 따라 본회의가 김형오 국회의장의 개회사 직후 폐회되면서 이명박 대통령의 추경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도 이뤄지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처리될 예정이었던 정기국회 의사일정안은 상정되지 않았으며 이에 따라 본회의가 김형오 국회의장의 개회사 직후 폐회되면서 이명박 대통령의 추경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도 이뤄지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처리될 예정이었던 정기국회 의사일정안은 상정되지 않았으며 이에 따라 본회의가 김형오 국회의장의 개회사 직후 폐회되면서 이명박 대통령의 추경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도 이뤄지지 않았다.

檢, 4·9 총선 수사 본격화

김성식 의원은 총선 당시 오세훈 서울시장의 지지 동영상을 자신의 홈페이지 등에 올려 놓은 혐의를 받고 있는데, 그는 논란이 되자 “선거 60일 전에 촬영된 것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다.

뉴타운 공약과 관련해 한나라당 의원들의 검찰 소환도 잇따를 전망이다.

검찰은 총선 때 오 시장으로부터 뉴타운 지정 약속을 받아냈다는 발언을 했던 정몽준(동작) 한나라당 최고위원에게도 조만간 출석을 요구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검찰은 김성식 의원의 지지 동영상을 촬영해 준 경위와 정몽준 최고위원과의 뉴타운 지정 관련 대화 내용 등을 조사하기 위해 오 시장 또한 직접 조사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檢 ‘비자금 조성’ 최규선씨 소환 조사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박용석 검사장)는 1일 오후 회삿돈을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등로 유아이에너지 대표 최규선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최씨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3남 흥경씨를 배경으로 각종 이권에 개입한 이른바 ‘최규선 게이트’의 장본인으로, 지난 2002년 5월 구속 기소돼 2003년 11월 징역 2년을 확정받아 5년 만에 또 다시 검찰에 소환된 셈이다.

검찰은 최씨가 이라크 지역 유전개발 사업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회삿돈을 빼돌려 수십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하고 사업성을 부풀려 투자금을 끌어들이거나 허위 공사 등을 통해 주가를 조작했는지 수사 중이다.

또 이라크 쿠르드 유전개발 컨소시엄에 포함되기 위해 정치권 등에 로비를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비자금의 사용처 파악을 통해 진위를 확인 중이다.

지난 5월부터 석유공사 및 해외 에너지 개발업체들의 비리를 수사해 온 대검 중수부는 최씨와 관련된 여러 잡보를 입수해 압수 수색과 계좌추적 등을 통해 수사를 벌였으며 비자금 조성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한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옷 벗기려는 사람이 옷 벗었다”

후 대통령 ‘햇볕정책’에 쓴소리

이명박 대통령은 1일 김대중 전 대통령의 ‘햇볕정책’과 관련, “원칙적으로 좋은 것이고 북한을 화합하고 개방하지는 않겠지만 결과가 우리가 생각하는 방향으로 나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항 잡지 사파이에 기고한 글을 거론하면서 “실용적으로 접근했다. (그의 주장은) 현안을 그대로 놓고 그 상태로 가면 된다. 한국이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일본은 주장을 안 할 수 없으니 주장은 하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그러나 이 대통령은 “내 생각은 확고하다”면서 “독도가 한국 땅이라는 것을 일본이 인정하는 게 좋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와 함께 중국의 ‘혐한(嫌韓) 분위기에 언급, “걱정이 크다”면서 “언론에서 방향도 잘 잡아주고, 해결되는 방향으로 가야 할 텐데...”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중앙글로벌 포럼 2008’에 참석, 홍석현 중앙일보 회장 등 참석자들과 간담회에서 이 같이 밝혔다. 청와대가 전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농담조로 “따뜻하면 옷을 벗어야 하는데 옷을 벗기려는 사람이 옷을 벗었다”고 조크, 좌중에 웃음을 자아냈다.

이 대통령은 또 일본의 독도 영유권 왜곡 기도와 관련, 일본의 유명 경제평론가인 오마에 겐이치가 보수우익 성향

이명박 대통령은 1일 김대중 전 대통령의 ‘햇볕정책’과 관련, “원칙적으로 좋은 것이고 북한을 화합하고 개방하지는 않겠지만 결과가 우리가 생각하는 방향으로 나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중앙글로벌 포럼 2008’에 참석, 홍석현 중앙일보 회장 등 참석자들과 간담회에서 이 같이 밝혔다. 청와대가 전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농담조로 “따뜻하면 옷을 벗어야 하는데 옷을 벗기려는 사람이 옷을 벗었다”고 조크, 좌중에 웃음을 자아냈다.

이 대통령은 또 일본의 독도 영유권 왜곡 기도와 관련, 일본의 유명 경제평론가인 오마에 겐이치가 보수우익 성향

가축법 합의 여파 ‘김빠진 쇠고기 국조’

여야 질의 겉잡기...한총리 불출석 공방만

1일 국회 최고기 국정조사 특위가 가동됐으나 여야 간의 가축법 개정안 합의가 이뤄진 데다 뒤늦은 기관보고 등으로 무기력하게 진행됐다.

특히, 이날 특위에서 여야 의원들은 깊이 있는 질의보다는 국정조사 과정의 원인이 됐던 한승수 총리의 불출석 문제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이날 민주당 김상희 의원은 “총리가 국민 대표기관인 국회의 출석 요구를 거부한 것은 명백한 국회, 국민 무시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한 총리의 공개 사과를 촉구했다.

민노당 강기갑 의원은 한 총리가 인사말을 한 뒤 일단 퇴장하자 “일문일답을 하지 않는 것만 해도 ‘김빠진 맥주’와 같은데, 질

의답변 과정을 청취하지 않은 채 자리를 뜰러 끝까지 버티고 나오지 말지 왜 나왔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한나라당 윤상현 의원은 “88년 이후 총리의 특위 출석 전례가 없는 관행을 깨고 한 총리가 결단을 내린 데 대해 높이 평가한다”고 방어에 나섰다. 같은 당 김용태 의원은 “야당이 총리 출석을 정쟁의 대상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가세했다.

그러나 일부 여당 의원들은 총리실이 쇠고기 협상 과정 등에서 제 역할을 못하고 뒷수습만 했다는 ‘쓴소리’도 제기했다.

여기에 이른바 ‘설거지론’과 ‘한미 정상회담 선물론’으로 대변되는 책임론 공방도 재연됐다.

한나라당 김기현 의원은 “노무현 정권 때

이미 한미 FTA(자유무역협정)와 연계, 미국산 쇠고기의 연령제한 철폐방향을 결정했다가 대선 패배 후 총선을 염두에 두고 몽땅 차기정부에 떠넘긴 것”이라며 ‘설거지론’을 거듭 제기했다.

그러나 민주당 김우남 의원은 특위에 앞서 ‘쇠고기 협상 관련 대응전략’ 문건을 공개하고 “농식품부가 쇠고기 협상에 앞서 사전에 대응전략을 대통령에게 보고해 승인 또는 추가지시를 받았다는 반증”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한총리는 이날 “국민불안 해소될 때까지 30개월 이상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www.gwangjuhospital.com

대표의원 '권철선' 임 '방광염' 임 '한영호' 임 '박성호' 임

일중한의원

신수동 10-10번길 10, 1층 (광주광역시 동구) ☎ 062-678-1075

- 신수동 10-10번길 10, 1층 (광주광역시 동구)
- 신수동 10-10번길 10, 1층 (광주광역시 동구)
- 신수동 10-10번길 10, 1층 (광주광역시 동구)

www.ielysia.com

i엘리시아

성공적인 판매! 돌잔치, 각종 모임 및 행사 (100석~500석)를 준비!

062-671-1199